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4월 6일 목요일 (음 3월 10일) 제178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5.9 대선 '상대방 족쇄채우기' 대결 격화

문재인, 수성 전략으로 안철수 등 막기 위한 '적폐 연대' 프레임 내세워

안철수, '상속자론'으로 자수성가한 지도자 이미지 시도... 다만, 정계입문 후 정치적 성취 보여주지 못해

비문들, '패권주의'로 문 후보 향한 공세 벌일 듯

정책·공약 실종되고 '가짜뉴스' 판칠 가능성도

5개 주요 정당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5.9 대선을 앞두고 34일간 뜨거운 본선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본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각각 본선 대결을 펼치게 됐다.

이번 '잠미대선' 본선은 5자 구도로 법진보 진영 3명, 범보수 진영이 2명이다. 여기에 이념적 성향을 떠나 '문재인 대세론'과 비문(비 문재인) 연대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합종연횡을 통한 새판짜기가 끊임없이 시도되면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가짜뉴스'가 판을 칠 가능성이 높고 정책과 공약보다는 상대 후보의 이미지에 족쇄를 채우는 프레임 대결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1라운드에서 가장 강력하게 맞붙고 있는 프레임은 '적폐 연대' 대 '패권 세력'이다. 적폐 연대 프레임은 가장 앞서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수성(守城) 전략' 중 하나다. 안 전 대표의 부상(浮上)을 막고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결집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포석이다.

문 전 대표 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안 전 대표를 향해 "적폐 세력을 지지한 표심에 손을 내미는 모습 자체가 촛불 민심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의 연대를 '적폐'로 규정할 셈이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을 이끈 '정권 교체 열망'이 가리웠을 수 있다는 고민이 깔려 있다. 이른바 '더 좋은 정권 교체론'이 다시 대선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는 얘기다.

안 전 대표가 최근 내놓은 '무능력한 상속자론'은 더 좋은 정권 교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

안 전 대표는 "무능력한 상속자에게 국가를 맡기면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예를 들었다.

그러면서 "유산을 받아 손쉽게 올라간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의 실제 타깃은 문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상속자라는 얘기다.

선거 전문가들은 상대의 단점을 공격하면서 후보의 장점이 부각돼야 캠페인의 파괴력이 커진다고 조언한다. 그런 점에서 '무능력한 상속자론'은 안 전 대표의 히든카드다. 문 전 대표를 '인자'로 깎아내리는 동시에 자신을 '자수성가한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안 전 대표가 정치 입문 이후 이렇다할 정치적 성취를 보여주지 못한 점은 숙제다.

문 전 대표를 향한 공세는 '패권주의'로 요약된다.

문 전 대표 진영이 '문재인 대 안철수' 양강 구도를 끝바로 안 전 대표와 구(舊)여권 간 연대로 규정하고, 반문 인사들을 향한 문자 폭탄을 '양념'이라고 받아넘기는 등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패권주의 프레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대표는 "나(문 전 대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불쌍식, 불의라고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패권주의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몰락 이후 권력의 도덕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만큼 반문 진영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부정부패와 실정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006년 불거진 도박 게임기 '바다이야기' 사건의 수익금 문제, 문 전 대표 이들의 특혜 취업 의혹,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석기 특별사면 문제 등을 '3대 의혹'으로 제기한 뒤 "국민 시각에서 패권적 오만함을 검증하겠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인재용 기자



5일 전주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제47회 전북기능경기대회에 출진한 도지사 자동차차체수리 경기에 참가하여 선수 및 감독관을 격려하고 있다.

도내 우수기능인들 '옥석 가리기'

전북기능경기대회 개막... 10일까지 도내 7개 경기장서

제47회 전북기능경기대회가 5일부터 10일까지 전주공업고등학교 등 도내 7개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5일 출진 도지사, 김승환 도교육감, 고광훈 전 주공용직장장 및 선수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대표 선서, 경기개시 선언 등 성황리에 개최식을 갖고 6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전북기능경기대회는 자동차 정비·기계설계 등 총 39개 직종에 400여 명이 참여한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발휘하는 축제의 한마당으로서, 그동안 지역의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배출하는 명실상부한 기능경연의 장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전북지역 기능인들이 세계를 향해 나라를 펴는 통로가 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입상한 영예의 수상자들은 올해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메달과 상금 외에 국가기술 자격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 등을 준다.

전북도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2014년 15위, 2015년 11위를 거둔데 이어, 2016년에는 20개 메달 획득으로 종합 10위의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10년내 진입을 목표로 선수와 유관기관 공동으로 적극 협력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대회기간 중에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Young Skill 올림피아드'를 열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이 선의 경쟁 속에서 재미있는 과학기술과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체험

행사를 마련한다.

또한, 미래의 공직업설계 등 기능과 관련된 주제로 전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백일장대회를 실시해 입상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참가학생 및 학부모, 일반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캐릭만들기, 한지종이접기, 피부관리 체험, 헤어 쇼 등을 마련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송하진 지사는 개최식 대회사로 통해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한방울의 땀이 이번 대회를 빛내줄 것이고 전국대회에서 전북도의 자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기능인들이 숙련기술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으며,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를 위해 전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文 비방 가짜뉴스 배후는 국정원"

문재인 후보 측, '신인회 개인 일탈로 끝내선 안돼 진짜 배후 반드시 밝혀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5일 자유한국당 소속 신인회 강남구청장이 대량 유포시킨 문 후보 비방글의 최초 작성자가 전직 국정원 직원이라는 폭로와 관련해 "2012년 국정원 댓글사건을 연상시키는 신종 '태극기 댓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문 후보 측 권혁기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사건의 배후에 자유한국당과 친박단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 구청장 개인적 차원에서 벌인 일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부대변인은 검찰과 경찰을 향해 "이번 사건을 신 구청장 개인적 일탈로 결론 내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이들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유포해 온 문 후보 비방글과 '가짜뉴스'의 진짜 배후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안기부, 국정원에서 2013년까지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국정원 직원이 작성해 자유한국당 인사를 통해 유포한 글에는 문 후보 비방뿐 아니라 '태극기 집회'를 전라적으로 해야 한다. 젊은 20, 30대들이 모여 댓글부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여선출 강남구의원인 신 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배포한 문 후보 비방글을 전직 국정원 직원이 최초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신 구청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하해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한편, 대선을 앞두고 양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지만, 유포 주체가 정식 등록 언론사인 경우에는 아예 수사 대상에 올리지도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언론사로 정식 등재된 곳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짜뉴스 등에 대해 등록된 언론사라 하더라도 엄정하게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

순창이 참 좋다

귀농·귀촌 최적지 순창
순창이 참 좋다!
순창 귀농은 더 좋다!

순창군 귀농·귀촌 상담전화
063)650-5172~5174

순창군 귀농·귀촌 홈페이지
www.gosunchang.com

순창군 SUNCHANG